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박경준, 변호사)

담 당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서회원 팀장, 이성윤 부장, 최윤석 간사, 문규경 간사 02-3673-2141)

제 목 : [보도자료]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총 14매)

보도일자 : 2023.07.25.(화) (오전 10시 반)

배포일자 : 2023.07.25.(화) (오전 10시 반)

[현역 국회의원 283명 전과경력 보유현황 조사발표]

민주화운동 · 노동운동 제외 전과경력보유 47명, 67건

- 67건 중 음주운전 38건,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 9건 순
- 각 정당은 부적격 배제 기준 강화하고, 예외없이 적용해야
- 음주운전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범죄 등 공천배제해야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서회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변호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력범·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선거범죄·재산범죄(사기 및 횡령)·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운동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다 부동산 보유자·과다 주식 보유자·징계 대상자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한다.
2.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 자료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2020.3.17.) 분석해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자료의 백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당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조사한 것이다.
3. 전과유형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의 당헌 및 당규 등을 참고하여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 위조, 무고), 각종 민생범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 등으로 분류했으며, 이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경력자는 공천배제해야 할 전과경력에서는 제외시켰다.
4. 조사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총 47명(16.6%)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 건수는 총 67건이고, 음주운전 관련 범죄 38건(56.7%), 민생범죄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 1건(1.5%) 순으로 나타났다.
5. 건별로는 4건의 전과경력을 보유한 김철민 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으로 가장 많다. 3건을 보유한 의원이 서영석(경기도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등 3명, 2건을 보유한 의원이 강훈식(충청남도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구자근(경상북도 구미시갑, 국민의힘), 김민석(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도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도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광역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이상현(울산광역시 북구,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특별시 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한무경(비례대표, 국민의힘), 허은아(비례대표, 국민의힘) 등 11명이다.
6. 전과 경력을 보유한 94명, 150건에 대해서는 징역, 자격정지, 집행유예, 벌금 등의 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화 운동·노동운동 관련 형을 제외하고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징역은 강력범죄에서 건당 42개월로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부정부패 범죄에서 건당 42개월, 벌금은 민생범죄에서 건당 545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7. 한편,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내역 상 5년 이내(2015~2019) 체납이 있었던 국회의

원은 283명 중 총 31명(11.0%)로 나타났고, 체납액 총 9,793만원으로 1인당 평균 316만원이었다.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원은 이정문(충청남도 천안시병, 더불어민주당), 송기현(강원도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도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한무경(비례대표, 국민의힘), 우원식(서울특별시 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광역시 사하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덕흠(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국민의힘), 노웅래(서울특별시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광역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이다.

8. 이러한 조사결과는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이다. 이에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배제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대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발표 및 각 당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및 배경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천개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음.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질검증을 위해 부동산 및 주식재산 등을 조사해 발표하며 각 정당의 공천개혁을 요구해왔음.
-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함. 각 정당이 강력범, 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 선거 관련 범죄,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하여 ‘예외없는 공천배제’를 적용하고, 국민이 원하는 공천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함.

2. 분석 대상 및 자료

- 분석대상 :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283명
 -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한 국회의원 미포함.
 -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미포함.
- 분석자료 : 경실련 2020년 3월 17일 분석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 경력자’ 보도자료의 백데이터를 분석함. 백데이터는 2020년 3월 후보자등록 때 선관위에 제출한 내역을 조사한 자료임.
- 분석방법 : 경실련의 공천 배제 기준과 각당의 공천 배제(부적격) 기준, 현역 의원의 전과 기록 등을 참고하여 전과 유형 분류
 - 강력범 : 강도상해
 - 부정부패 : 알선수재 (외), 특가법 (외)
 - 재산 범죄 : 사기, 업무상 횡령, 상법(외), 증권거래법
 - 선거 범죄 : 공직선거법(외), 정치자금법
 - 파렴치 범죄(1) : 도로교통법(외),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파렴치 범죄(2) : 공문서변조, 문서위조 외
 - 파렴치 범죄(3) : 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 민생범죄 : 건설업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저작권법, 폐기물

관리법, 농지법(외)

- 민주화운동·노동운동 및 기타 : 국가보안법(외), 집시법(외), (특수) 공무집행방해 외, 공용물건 손상, 소요,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3. 분석내용

1) 전과 현황

- (1)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전과경력 보유 94명(전과경력자 비중 33.2%),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는 47명(전과경력자 비중 16.6%)

<표 1> 현역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 보유현황

정당	총 의원 수 (명)	전과있음 (명)	비중	전과건수
더불어민주당	165	68	41.2	118
국민의힘	100	22	22.0	27
정의당	6	3	50.0	4
기본소득당	1	0	0.0	0
시대전환	1	0	0.0	0
무소속	10	1	10.0	1
합계	283	94	33.2	150

○ 분석 대상 282명 중 전과경력 보유한 의원은 94명으로, 비중은 33.3%로 나타남.

- 더불어민주당은 165명 중 68명(41.2%, 118건)
- 국민의힘은 100명 중 22명(22.0%, 27건)
- 정의당은 6명 중 3명(50.0%, 4건)
- 기본소득당 : 1명 중 0명
- 시대전환 : 1명 중 0명
- 무소속 : 10명 중 1명(1건)

<표 2> 현역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 보유현황(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

정당	총 의원 수 (명)	전과있음 (명)	비중	전과건수
더불어민주당	165	27	16.4	44
국민의힘	100	19	19.0	22
정의당	6	0	0.0	0
기본소득당	1	0	0.0	0
시대전환	1	0	0.0	0

무소속	10	1	10.0	1
합계	283	47	16.6	67

○ 전과기록 중 민주화 운동·노동운동 관련 범죄를 제외한 일반 전과 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47명으로, 비중은 16.6%로 나타남.

- 더불어민주당 : 165명 중 27명(16.5%, 44건)
- 국민의힘 : 100명 중 19명(19.0%, 22건)
- 무소속 : 10명 중 1명(10.0%, 1건)

(2) 전과건수는 총 150건,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하면 총 67건, 음주운전, 민생범죄, 선거범죄 순으로 많아

〈표 3〉 전과 유형별 통계

정당	전과 경력 보유 (명)	전과건수(건)									
		소계	강력 범	부정 부패	재산 범죄	선거 범죄	파렴치범죄			민생 범죄	민주화 운동 등
							음주 운전	문서 위조	무고		
더불어민주당	68	118	1	2	2	8	23	2	0	6	74
국민의힘	22	27	0	0	1	1	15	0	1	4	5
정의당	3	4	0	0	0	0	0	0	0	0	4
기본소득당	0	0	0	0	0	0	0	0	0	0	0
시대전환	0	0	0	0	0	0	0	0	0	0	0
무소속	1	1	0	0	0	0	0	0	1	0	0
합계	94	150	1	2	3	9	38	2	2	10	83
		100.0	0.7	1.3	2.0	6.0	25.3	1.3	1.3	6.7	55.3

○ 전체 150건의 전과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과 기록은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이 83건(55.3%)임. 이어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8건(25.3%)이었음. 각종 민생범죄는 10건(6.7%)이었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9건(6.0%)임.

〈표 4〉 전과 유형별 통계(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

정당	전과 경력 보유 (명)	전과건수(건)								
		소계	강력 범	부정 부패	재산 범죄	선거 범죄	파렴치범죄			민생 범죄
							음주 운전	문서 위조	무고	
더불어민주당	27	44	1	2	2	8	23	2	0	6
국민의힘	19	22	0	0	1	1	15	0	1	4
정의당	0	0	0	0	0	0	0	0	0	0

기본소득당	0	0	0	0	0	0	0	0	0	0
시대전환	0	0	0	0	0	0	0	0	0	0
무소속	1	1	0	0	0	0	0	0	1	0
합계	47	67	1	2	3	9	38	2	2	10
		100.0	1.5	3.0	4.5	13.4	56.7	3.0	3.0	14.9

- 만주화운동·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면, 67건 중 음주운전 관련 범죄 38건(56.7%), 민생 범죄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 2건(3.0%), 문서위조 2건(3.0%), 무고 2건(3.0%), 강력범 1건(1.5%) 순으로 나타남.

(3) 전과 2건 이상 국회의원 현황(민주화 및 노동운동 제외) : 4건 1명, 3건 3명, 2건 11명, 1건 32명

<표 5> 전과경력 건별 현황

	전과경력 보유(명)	전과건수(건)					
		소계	5건	4건	3건	2건	1건
전체	94	150	1	5	5	27	56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	47	67	0	1	3	11	32

- 전과 경력자는 총 94명 중 5건이 1명, 4건이 5명, 3건이 5명, 2건이 27명, 1건이 56명임.

- 민주화 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하면 전과 경력자 47명 중 4건이 1명, 3건이 3명, 2건이 11명, 1건이 32명임.

<표 6> 민주화 및 노동운동 제외 전과 2건 이상 국회의원 명단

전과건수	성명	지역구	소속	위반건
4건(1명)	김철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건축법 2건, 음주운전 2건
3건(3명)	서영석	경기도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1건, 업무상 횡령 1건, 음주운전 1건
	설훈	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외 1건, 공직선거법 외 1건, 음주운전 1건
	신정훈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음주운전 1건, 농지법 외 1건, 특가법 외 1건
2건(11명)	강훈식	충청남도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무면허운전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건
	구자근	경상북도 구미시갑	국민의힘	도로교통법 1건, 음주운전 1건

	김민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2건
	박정	경기도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1건, 도로교통법 1건
	소병훈	경기도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외 1건, 음주측정 거부 1건
	송갑석	광주광역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음주운전 1건, 사기 1건
	이상헌	울산광역시 북구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2건
	이용선	서울특별시 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	음주운전 2건
	이학영	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강도상해 1건, 공직선거법 1건
	한무경	비례대표	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1건, 산업안전보건법 1건
	허은아	비례대표	국민의힘	음주운전 2건

* 민주화 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 전과 1건은 32명임.

(4) 전과 유형별 형의 집행 현황

<표 7> 전과 유형별 형의 집행 현황

범죄 종류		건수	형의 집행 유형(건당 평균)			
			징역(월)	자격정지(월)	집행유예(월)	벌금(만원)
강력범		1	42.0	0.0	0.0	0.0
부정부패		2	27.0	0.0	42.0	0.0
재산범죄		3	0.0	0.0	0.0	366.7
선거범죄		9	2.9	0.0	6.7	166.7
파렴치범죄	음주운전	38	0.0	0.0	0.0	150.0
	문서위조	2	15.0	0.0	12.0	0.0
	무고 등	2	0.0	0.0	0.0	500.0
민생범죄		10	0.0	0.0	0.0	545.0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83	16.7	6.4	13.5	29.8
합계		150	10.2	3.6	8.6	114.8

○ 전과경력을 보유한 94명(150건)에 대하여 건당 평균 징역 10.2개월, 자격정지 3.6개월, 집행유예 8.6개월, 벌금 114.8만원의 형이 집행되었음.

- 강력범(1건) : 1건당 징역 42개월
- 부정부패(2건) : 1건당 징역 27개월, 집행유예 42개월
- 재산범죄(3건) : 1건당 벌금 366.7만원
- 선거범죄(9건) : 1건당 징역 2.9개월, 집행유예 6.7개월, 벌금 166.7만 원
- 음주운전 (38건) : 1건당 벌금 150만 원

- 문서위조 (2건) : 1건당 징역 15개월, 집행유예 12개월
- 무고 (2건) : 1건당 벌금 500만 원
- 민생범죄 (10건) : 1건당 벌금 545만 원
- 민주화 및 노동운동 관련(83건) : 1건당 징역 16.7개월, 자격정지 6.4개월, 집행유예 13.5개월, 벌금 29.8만원 등

2) 체납 현황 : 과거 체납이력 있었던 국회의원은 총 31명(체납자 비중 11.0%), 체납액 총 9,793만원(1인당 평균 316만원)

〈표 8〉 현역 국회의원 중 과거 체납 이력 현황(2015년~2019년)

정당	총 의원 수 (명)	체납 있음 (명)	비중(%)	총 체납액(천원)	인당 평균 체납액(천원)
더불어민주당	165	17	10.3	87,748	5,162
국민의힘	100	12	12.0	9,254	771
정의당	6	0	0.0	0	0
기본소득당	1	0	0.0	0	0
시대전환	1	1	100.0	528	528
무소속	10	1	10.0	399	399
합계	283	31	11.0	97,929	3,159

○ 현역 국회의원 총 283명 중 2020년 20대 총선 후보자로서 과거 5년 이내(2015~2019) 체납 경력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31명이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9,793만원(인당 평균 316만원)임.

- 더불어민주당 : 165명 중 17명(10.3%), 인당 평균 체납액 516만원
- 국민의힘 : 100명 중 12명(12.0%), 인당 평균 체납액 77만원
- 시대전환 : 1명 중 1명(100.0%), 인당 평균 체납액 53만원
- 무소속 : 10명 중 1명(10.0%), 인당 평균 체납액 40만원

○ 과거 체납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국회의원 총 10명임.

〈표 9〉 과거 체납액 100만원 이상 국회의원 명단(2015년~2019년)

성명	지역구	소속	최근 5년 이내 체납액(천원)
이정문	충청남도 천안시병	더불어민주당	33,635
송기현	강원도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32,649
서영석	경기도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9,406
설훈	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4,167
한무경	비례대표	국민의힘	2,257
우원식	서울특별시 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1,668

최인호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더불어민주당	1,526
박덕흠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국민의힘	1,374
노웅래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1,099
유동수	인천광역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1,035

3) 병역 현황 : 283명 중 군 복무 마친 아니한 사람 44명(19.2%)

〈표 10〉 현역 국회의원 중 병역 현황

정당	총 의원 수	군 복무를 마친 사람(A)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B)	해당없음(비대상)(C)	병적 기록 없음(D)	비중 (B/(A+B))
더불어민주당	165	107	31	27	0	22.5
국민의힘	100	71	12	16	1	14.5
정의당	6	0	1	5	0	100.0
기본소득당	1	0	0	1	0	-
시대전환	1	1	0	0	0	0.0
무소속	10	6	0	4	0	0.0
합계	283	185	44	53	1	19.2

○ 현역 국회의원 총 283명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44명이고, 비중은 19.2%임.

- 더불어민주당 : 165명 중 31명(22.5%)
- 국민의힘 : 100명 중 12명(14.5%)
- 정의당 : 6명 중 1명(100.0%)

4. 각 당 공천개혁 촉구 및 경실련 요구

○ 거대 양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란 및 소속 국회의원의 비위 행위 등으로 인한 논란을 덮기 위하여 정치개혁, 정치혁신 등을 외치고 있음. 하지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큼.

○ 현재 각 당에 부적격 심사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 국민 불신이 큼.

〈표 11〉 각 당 부적격 심사기준

정당	당규	내용
더불어민주당	당규(당규 제10호 제	1.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6조).	<p>2. 징계 경력 보유자</p> <p>3.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p> <p>4.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앞두고 있는 자</p> <p>5.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자</p> <p>※ 하지만 해당하는 후보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p>
	특별당규(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p>예외없는 부적격 심사 : 강력법,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p> <p>부적격 심사 기준 :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불복 경력 보유자, 부정부패, 선거 관련,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p> <p>※ 특별 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이 빠져 논란</p>
국민의힘	당규(제14조)	<p>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p> <p>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p> <p>나. 뇌물 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p> <p>다.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p> <p>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p> <p>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p>

○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함.

① 각 당에 공천 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규정 삭제 등 공천개혁을 촉구함.

-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예외없는 공천배제 기준을 당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함. 공천 배제 기준으로 강력법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범죄, 민생 범죄 등을 규정하고,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 ②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 제외 전과경력자 47명 중 27명(음주운전 1건 제외)에 대해서는 공천배제 해야 함.

별첨 : 각당 공천 시스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공천		
공천배제 혹은 적격 심사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단계 이전에 별도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구성,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 및 도덕성 검증. 검증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이 중 50% 이상은 외부 인사(당헌 제86조, 당규 제10호 제4조)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완료한 이후에 추천 결과에 대해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적격 여부 심사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무작위로 모집한 일반 국민 35명과 사회분야 전문가 및 당원 대표성 가진 15명으로 구성.
공천배제 혹은 적격 심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 징계 경력 보유자 -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자 - 해당하는 후보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차성과 최고위 의결로 예외 인정) (당규 제10호 제6조) 	<p>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나. 뇌물 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다.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당규 제14조)
관리기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포함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정원의 절반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 위원,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임명
심사 기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
단수 후보 추천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사람이 1명인 경우, 혹은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의 자질이나 경쟁력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수 후보 추천 가능	
경선의 경우	2명 이상의 후보자 추천시 경선 통해 결정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대상으로 선거인단 구성하여 투표 실시, 여론조사 실시) 권리당원의 투표나 조사는 최종 결과에 50% 이하로만 반영	책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50%와 유권자 여론조사 50% 합산,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전략공천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와 별도로 전략공천위원회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설치, 전략공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당대표가 전체 선거구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 지역구 선정	별도의 기구 없음.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선추천지역을 전체 선거구 수의 20% 범위 내에서 선정. 다만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의 우선추천지역 결정 이후 대상 지역 및 추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심사
비례대표 의원 공천		
공천관리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11명 이내의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	
자격심사	국민공천심사단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층 심사를 거쳐 후보자 명부 확정하면 이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 비례대표선출선거인단은 10명 이상의 대의원과 20명 이상의 당원 포함 30명 이상으로 구성	국민공천배심원단 비례대표선거인단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당원